

# 한일 간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배경과 논쟁

강철구\*  
kcheolgu@pcu.ac.kr

윤일현\*\*  
ihyoon58@gdsu.dongseo.ac.kr

## <目次>

- |                         |                           |
|-------------------------|---------------------------|
| 1. 서론                   | 3.2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문제       |
| 2. 일본기업집단의 경제성장 과정      | 4. 한일 양국의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과 논쟁 |
| 2.1 기업집단과 메인뱅크          | 4.1 기업집단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방향   |
| 2.2 버블경제 및 붕괴과정에서의 기업집단 | 4.2 양국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논란과 쟁점 |
| 3. 한국대기업집단의 경제성장 과정     | 5. 결론                     |
| 3.1 대기업집단의 성장배경         |                           |

主題語: 경제력집중(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집단(conglomerates)

## 1. 서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력집중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up>1)</sup>에 대한 억제정책을 개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sup>2)</sup> 이에 비해 일본은 패전 후 미 점령군(GHQ)에 의해 재벌 본사가 해체되고 그 후 시장지배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주저자

\*\*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글로벌금융전공 교수, 교신저자

1) 경제력집중이란 '경제적 자원과 수단을 소유-지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 집중되어 이들이 다른 경제주체의 선택과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상태를 지칭'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이 국민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기업집단 혹은 재벌의 문제로 압축된다(류승민, 1992. p.5).

2)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대기업집단'이고 '재벌'은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재벌'은 패전 후 '기업집단'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문맥상 필요에 의해 혼용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위해 분할대상 기업을 지정하였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재벌은 ‘기업집단’ 혹은 ‘기업계열’로 이름만 바뀐 채 재등장하였고, 이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기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기업집단과 고도경제성장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 후 한국에서의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함의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집단은 소유구조와 경영형태면에서 한국의 오너경영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집단과 한국의 기업집단을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매년 자산총액기준으로 재계서열순위를 만들고 있지만, 일본은 2000년대 들어와 6대기업집단이 서서히 붕괴되면서 이러한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 점령군(GHQ)에 의해 타의적으로 재벌해체 및 재벌동족의 재산몰수 등의 ‘경제민주화’를 실시하였으나, 한국은 일제식민지 이후 귀속재산의 상당부분이 민간불하를 통해 기업집단을 형성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첫째, 한일 양국 기업집단의 형성배경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이 고도경제성장 기간 동안에 국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기업집단은 그 맥락과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일본에 정착된 법인자본주의와 한국의 창업자 일족에 의한 오너경영지배 등 양국의 상이한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상호보유를 해 왔다는 공통점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양국의 기업집단에 대한 기본 인식과 향후 기업집단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 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2. 일본 기업집단의 경제성장 과정

### 2.1 기업집단과 메인뱅크

일본은 패전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피라미드형 소유구조, 즉 모회사(본사)-자회사-손자회사의 형태를 띠면서 재벌 본사가 계열사를 전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동족집단의 형태를

보였으나, 패전 후 GHQ의 재벌해체 및 독점금지법에 의해 가족 및 동족 등의 기업지배가 소멸되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졌다.<sup>3)</sup> 이 후 기업의 주된 자금제공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이었는데, 이는 GHQ가 1947년 12월 당시「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에서 은행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은행을 제외했던 것은 패전 후 일본의 자본시장이 미성숙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패전으로 인해 일본이 직면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국가적 혼란이 염려된다는 판단과 일본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때 은행은 대기업을 재건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 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커져 갔다.

일본은 당시 독점금지법 제11조에 의해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는 상대회사 발행주식수의 5%라는 한도를 두었지만, 1952년에 10%까지 확대되어 금융기관과 사업회사가 상호간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의 법인화작업이 진행되었다. 이후 1977년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재차 5%로 인하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업집단의 중심이 된 메인뱅크가 기업을 지배하는 과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Kang and Shivdasani(1995)에 의하면, 기업 업적이 악화되었을 때 메인뱅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은 기업경영자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Sheard(1994)는 메인뱅크가 재무상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업을 재구축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 외 広田(2005)는 기업과 메인뱅크 관계가 오늘날에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Hukuda and Hirota(1996)는 메인뱅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절약해 준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메인뱅크의 기업지배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6대기업집단은 메인뱅크로부터 60-90년대에 걸쳐 20% 전후의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메인뱅크가 기업의 최대 채권자인 동시에 자금을 제공받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라는 것이다. 일본 기업은 고도성장기에 필요했던 자금을 주로 메인뱅크에 의존하였고 다른 자금조달 수단은 보완적으로 밖에 이용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재벌이 해체된 후 은행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며, 60-70년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구미선진국의 경영수법과 달리 일본적경영이라는 특징을 나타냈다.<sup>4)</sup>

3)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는 1946년 8월 ‘지주회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지주회사 해체, 재벌가족의 기업지배력 배제, 주식소유의 분산, 경제력집중 배제 등을 통해 재벌해체작업을 진행 하였다.  
 4) 일본적경영의 특징은, 1) 주식상호보유, 메인뱅크제도, 기업그룹형성 등 상호의존적인 기업관계, 2)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노동조합 등 일본적 고용관행, 3) 관료통제, 관민협조, 업계단체 내 조정에 의한 경쟁배제적 시장, 4) 완전한 기업회계원칙과 한정된 기업정보공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lt;표 1&gt; 일본 6대기업집단의 메인뱅크 차입의존도

(단위 : %)

| 년도   | 三菱    | 三井    | 住友    | 芙蓉    | 第一勸銀  | 三和    | 평균    |
|------|-------|-------|-------|-------|-------|-------|-------|
| 1955 | 19.50 | 20.60 | 21.31 | 25.71 | 20.45 | 24.84 | 22.05 |
| 1960 | 20.94 | 16.16 | 18.16 | 22.34 | 15.36 | 22.99 | 19.33 |
| 1965 | 18.15 | 14.31 | 17.80 | 20.57 | 13.85 | 19.23 | 17.32 |
| 1970 | 27.31 | 23.32 | 28.12 | 27.03 | 12.92 | 21.96 | 23.44 |
| 1975 | 20.43 | 26.95 | 25.22 | 25.99 | 18.02 | 21.82 | 23.07 |
| 1980 | 17.04 | 24.00 | 23.29 | 22.18 | 15.15 | 20.60 | 20.38 |
| 1985 | 16.01 | 23.44 | 22.28 | 19.73 | 14.82 | 18.31 | 19.10 |
| 1990 | 15.63 | 20.15 | 14.11 | 18.93 | 15.83 | 18.39 | 17.17 |
| 1995 | 17.24 | 22.47 | 20.31 | 19.73 | 16.91 | 18.94 | 19.27 |
| 1998 | 17.61 | 22.73 | 23.91 | 18.58 | 17.34 | 26.24 | 21.07 |

자료 : 鈴木 健(2008), p.36

한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주식가치의 등락과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타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안정주주’라고 부른다.<sup>5)</sup> 더군다나 일본 기업의 최고경영진의 92%가 내부에서 승진된 토박이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 기업의 경영자는 각각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이해가 성립되어 다른 주주로부터 오는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안정주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최대 목적인 것이다.<sup>7)</sup>

한편 다수의 주주들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주주는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경영자 감시에 따른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발생한다.<sup>8)</sup> 기업의 경우 주주(principal)와 경영자

5) 일본기업들은 법인에 의한 주식상호보유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반주주는 경영보다는 주가동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6) 강명현(2000), p.258

7) 예를 들어 공개매수(take over bid)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이 타기업의 주식을 구입하고자 해도 상호주식보유기업이 주식을 대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TOB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당장 주식을 매각하지는 않는다(山本達司(2009), p.60).

8) 대리인 비용은 의뢰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상호 목적이 다르고 정보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이 의뢰인의 희망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대리인이 의뢰인의 희망대로 행동 하도록

(agent)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인 비용은 그만큼 커지지만, 일본기업은 패전 이후 재벌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고 이는 결국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정보의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본의 메인뱅크는 다른 자금공급자를 대신하여 대출기업의 신용도, 경영방침 및 업적, 그 외의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정보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리인비용을 절약하는 기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그 외 메인뱅크는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여 내부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상시 기업을 감시할 수 있고, 당해기업이 경영곤란에 빠질 경우 경영에 직접 개입하여 경영진의 쇄신을 요구하는 등 기업을 재건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이는 실질적으로 메인뱅크가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Hoshi and Scharfstein(1991)은 메인뱅크 관계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독립기업으로 나누어 설비투자함수를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내부자금의 제약이 적다는 것을 알았고, 이는 메인뱅크관계가 대리인비용을 삭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기업집단의 메인뱅크 관계를 통해 자금제약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결국 설비투자를 확대하면서 일본의 고도성장을 지탱해 온 요인이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메인뱅크와 기업 간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 기업의 사업경영에 따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기능을 갖고 있다. 즉 금융시장의 금리가 높을 경우 은행은 기업에 다소 낮은 대출금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반대로 금융시장의 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다소 높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는 등 상호간에 위험을 분산(risk sharing)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메인뱅크는 기업이 도산 위기에 빠질 때 구제해야 할지 청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메인뱅크가 사후의 구제처리까지 떠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인뱅크에 경영정보를 은닉하지 않으려는 인센티브를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중요한 정보가 경영자에 의해 은닉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면 메인뱅크에 의한 구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경영자가 평소에도 메인뱅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세한 경영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메인뱅크는 기업이 재무상 위기에 직면할 때 구제수단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대출기업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메인뱅크와의 거래량을 늘리거나 지불결제계좌를 메인뱅크에 집중해서 그에 따른 운용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 中谷(1984)는 이를 ‘대출자에 대한 도산보험의 제공자(借り手に對する倒産保險の提供者)’라고 정의하였다. 이

---

유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는 결국 메인뱅크가 대리인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설비투자에 대한 순기능을 발휘해 왔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다.<sup>9)</sup>

그러나 메인뱅크에 의한 모니터링 기능은 80년대 들어와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우량 대기업을 시작으로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기업경영자는 메인뱅크에게 경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임시킬 필요가 줄어들었다. 결국 계열사 대기업을 중심으로 간접자금조달에서 직접자금조달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메인뱅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다.

## 2.2 버블경제 및 붕괴과정에서의 기업집단

일본의 전후 기업지배구조의 근간을 이루어 온 메인뱅크제도 및 상호주식보유는 9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갔다. 버블경제가 붕괴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요 도시은행이 기업에 부당하게 융자한 자금이 부실채권화 되자 일본정부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주입하였고, 이때부터 일본사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失われた10年)이라고 불리는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효율성을 높이는 해결책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주목받았다. 1997년부터는 패전 직후 금지시켰던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가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sup>10)</sup>

글로벌 경쟁 하에서도 일본의 기업집단은 주식상호보유에 의한 주주안정화라는 기본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해 왔지만,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기업의 업적부진으로 인해 일본형 기업지배구조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기업이 금융시장으로부터 직접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메인뱅크에 의한 지배(governance)는 서서히 약해졌고 기업집단도 사실상 그 의미가 무색해지면서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상장기업의 주식상호보유비율이 저하되면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 안정보유 주식비율이 크게 저하되었다.<sup>11)</sup> 그러나 Fukao(1998)에 의하면

9) 메인뱅크의 정보생산기능에 관해서는 池尾・廣田(1992)을 참조.

10) 지주회사가 피라밋형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주식취득을 통해 타 회사를 지배한 후 피지배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방식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형태는 결국 적은 자본으로 거대한 자본과 생산수단의 지배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공정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지주회사 그 자체가 경제력집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금지해 왔던 것이다(菊沢(2004), p.31).

11) 일본경제재정백서(2008), p.136

메인뱅크제도와 상호주식보유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두 제도가 급격히 해체되지는 않으리라는 분석을 내 놓기도 하였다. 또한 宮島 외(2002)는 오히려 메인뱅크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우량한 기업집단이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이면서 메인뱅크 중심으로 차입구조를 바뀌어나가기 때문이라고도 하였다.

한편 버블붕괴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방법이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이동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점점 이탈하는 현상을 보였다. 메인뱅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안정주구조가 붕괴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6대기업집단 체제의 자금조달을 담당했던 메인뱅크가 거대은행(mega bank)으로 재편되면서 서서히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sup>12)</sup>

원래 일본의 기업집단은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 장점을 발휘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산업구조가 소프트화, 정보화, 서비스화 되면서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제적 기능은 약화되고 나아가 은행의 합병 등의 변화로 기업집단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가 변하면서 메인뱅크로부터의 간접금융이 줄어들고 자금 시장에서 직접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다고 해서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과 기업집단의 성장에 있어서 메인뱅크의 영향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 3. 한국 대기업집단의 경제성장 과정

#### 3.1 대기업집단의 성장배경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의 성장배경 중 중요한 점은 일제 식민지 시절이 끝난 후 귀속사업을 불하받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1960년대에는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에 의해 재벌에게는 우선적으로 외환을 배정하기도 했고, 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정부소유의 도시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융자의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것이다. 특히 도시은행은 심사에 근거하여 융자를 결정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금융기준에 일치하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었으며, 은행은 정책 금융의 창구에 불과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은행의 본업인 기업을 모니터하는 역할은 제대로

12) 6대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역할을 담당했던 메인뱅크의 합병은 다음과 같이 3대금융그룹으로 재편되었다. (1)三菱, 三和 : 三菱UFJFG, (2)富士(芙蓉), 第一勧業 : みずほFG, (3)三井, 住友 : 三井住友FG.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은행과 대기업의 메인뱅크 관계까지 붕괴된 것은 아니다.

하지 못했다. 이때 재벌은 정경유착을 통한 정부의 보호 아래 기업다각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재벌의 기초를 다져 놓은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재벌은 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과 중동건설 붐 등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재벌의 비리와 비판은 거세졌고 특히 오너에 의한 독단적인 경영은 소유지분으로 거대한 기업군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나친 비대화 및 경제력집중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었다. 1981년부터는 대부분의 도시은행이 민영화되는 과정이 있었으나, 정부가 은행 업무를 강하게 통제하는 ‘관치금융’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졌다. 정부는 기업의 수출실적, 생산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에 보다 많은 우대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확대 등을 유도하였으며, 은행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인 기업을 모니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62년 증권거래법의 제정, 그리고 1979년 12월에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간의 주식상호취득을 금지하였으며, 1981년 4월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경제력집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상장비상장구별 없이 주식상호출자를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언급되었다. 1984년 3월에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식의 상호보유제한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 채택되었으며, 1986년 12월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재벌그룹의 상호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는데, 이는 상호출자가 재벌동족에 의한 산하기업 지배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sup>13)</sup> 이후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집단은 낮은 내부지분율로 인해 적대적 인수 위협에 노출되면서 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구조조정이 필요하거나 경영권이 불안정해졌을 경우에 대비하여 상호출자관계 대신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해 나갔다.<sup>14)</sup>

### 3.2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문제

한국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집중 억제방식을 논의 대상으로 내세우

13) 그러나 Chang(2003)은 세계경제가 단일시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르는 대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세계적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며, 이러한 제도가 대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14) 공정위에서는 3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순차적으로 주식을 교환하고 소유하는 연쇄적인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이 형성되어 지배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를 사전에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4월 12일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63개로 소속 전체계열회사는 1,832개에 달한다. 이중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51개이며 소속계열회사는 총 1,740개이고 그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이 43개이다.

고 있어서 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주식소유제한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력집중에 대한 법적규제를 명시한 것은 198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서 일본의 「독점금지법」과 동일한 법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 1984년 4월 상법 개정에서는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4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그 다른 계열사는 출자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그 다른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출자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규모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에 따라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대기업그룹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서 서구 선진국들이 경제력집중 억제책으로 시장집중만을 선택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시장집중 뿐만 아니라 소유집중 억제방식까지 확대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등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해 온 정책이기도 하다.<sup>15)</sup>

한편 지주회사의 설립금지를 비롯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 등의 출자규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후로도 시대상황과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예를 들어 1990년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회사 간 상호출자 예외적용을 폐지하고 이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금융·보험회사들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집중 소유하여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1993년 4월부터는 자산총액 1~30위까지를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을 규정하고, 1995년에는 경제력집중 규제제도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출자한도를 당해회사 순자산 대비 40%에서 25%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때 기업들의 자율적인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우량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우량기업집단은 아니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유분산 우량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1996년 12월에는 계열사 간 상호지원에 의한 경쟁제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하였으며,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이 후로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소위 재벌개혁 정책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98년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때 폐지되었다가 부작용이

15) 공정거래법에서 주식소유제한에 관한 대표적인 규제로는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의 주식소유에 대한 규제,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등이 있다.

커지면서 2001년 3년 만에 부활했고 이후 계속 완화되어 오다가 2009년 3월 마침내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이는 다양한 규제 장치를 전제할 경우 기업집단에 비해 지주회사 체제가 경영투명성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재벌은 짧은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창업주나 혹은 그 자손들이 최고경영자 직책을 갖고 적은 지분으로 내부지분을 활용해 기업을 지배해 오다 보니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표 2 참조).

<표 2> 한국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 변화

(단위: %)

| 연도   | 기업집단수 | 계열사수 | 동일인 (A) | 친족합계 (B) | 계열회사 (C) | 자기주식 (D) | 내부지분율 (A+B+C+D) |
|------|-------|------|---------|----------|----------|----------|-----------------|
| 1987 | 29    | n.a  | 15.8    | -        | 40.4     | -        | 56.2            |
| 1989 | n.a   | n.a  | 14.9    | -        | 31.3     | -        | 46.2            |
| 1991 | 30    | 604  | 13.9    | -        | 33.0     | -        | 46.9            |
| 1993 | 30    | 604  | 10.2    | -        | 33.2     | -        | 43.4            |
| 1995 | 30    | 623  | 10.6    | -        | 32.4     | 0.4      | 43.3            |
| 1997 | 30    | 821  | 8.5     | -        | 33.7     | 0.8      | 43.0            |
| 1999 | 30    | 669  | 5.4     | -        | 45.1     | -        | 50.5            |
| 2001 | 30    | 624  | 6.0     | 4.67     | 19.10    | 6.7      | 36.4            |
| 2003 | 42    | 815  | 8.6     | 5.67     | 18.07    | 6.4      | 38.8            |
| 2005 | 46    | 910  | 8.0     | 7.22     | 20.53    | 4.8      | 40.6            |
| 2007 | 55    | 1156 | 7.9     | 5.55     | 22.74    | 4.0      | 40.3            |
| 2009 | 40    | 1096 | 6.8     | 4.44     | 20.65    | 3.5      | 35.4            |
| 2011 | 47    | 1512 | 6.6     | 4.00     | 27.23    | 2.6      | 40.4            |
| 2012 | 51    | 1740 | 7.4     | 3.34     | 28.05    | 2.1      | 40.9            |

주 : 1) 1992년까지는 총자산 4천억원 이상이 기업집단, 이후 상위 30대 기업집단

2) 소유지분구조는 상장회사만 계산

3) 친족합계=배우자+혈족1~6촌+인척 4촌이내

4) 2009~2012년까지는 4월 발표 데이터 인용

자료 : 정균화(1998), p.343 및 공정거래위원회(<http://groupopni.ftc.go.kr/index.jsp>) “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 현황” 각 년도

한편 <표 3>의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의 매출기준 집중도를 보면 2000년 44.1%, 2005년 35.8%, 2008년 34.7%, 2010년 35.8% 등 단기간의 등락 과정은 있어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대 기업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4대그룹의 주력업종에의 특화율(1대업종매출/그룹전체매출)과 4대그룹 3대업종전문화율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라는 통계수치를 보면,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단순히 대기업을 문어발식확장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한국의 30대 및 10대기업집단의 매출집중도 및 주력업종 특화율  
(단위 : %)

|               | 2000년 | 2005년 | 2008년 | 2010년 |
|---------------|-------|-------|-------|-------|
| 30대기업집단       | 44.1  | 35.8  | 34.7  | 35.8  |
| 10대기업집단       | 36.9  | 27.5  | 25.3  | 27.4  |
| 4대그룹주력업종특화율   | 36.9  | 59.4  | 53.9  | 54.8  |
| 4대그룹 3대업종전문화율 | 70.5  | 73.6  | 78.0  | 76.6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인용(2012. 3. 1)

## 4. 한일 양국의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과 논쟁

### 4.1 기업집단에 대한 기본 인식과 정책방향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력집중은 기업집단의 소유집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업 간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동기는 60년대 고도경제성장 기간 동안 정부 주도하에 대기업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실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전략적 산업을 선정하여 기술과 자금, 그리고 인력과 조직 등에서 유리한 기업집단에게 조세, 금융, 무역 등에서 보호 내지는 지원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경제력집중으로 순환되는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경제력집중이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정서상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즉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요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만연해 있다. 이는 첫째, 과도한 경제력집중은 대기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 무분별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반면 중소기업에 적합한 고유 업종 분야에까지 지나치게 침투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존립영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산업구조를 왜곡시키게 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기업집단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비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속한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대출이 특정 기업집단에 집중되면서 경제력집중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결국 경쟁적인 시장기능의 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기회균등 차원에서조차 경제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형성되고, 대체로 개인 또는 가족중심의 지배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자원과 수단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경제주체인 재벌에 집중되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력집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개발도상 경제에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6)</sup>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가?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전전의 재벌이란 용어가 전후 재벌해체 후에는 기업집단 혹은 기업계열 등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sup>17)</sup> 일본의 6대기업집단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당시에는 전체자산의 11.2%, 자본금의 13.2%, 매출액의 10.8%를 차지하였지만, 이후 은행의 합병 등으로 기업집단 자체가 서서히 해체되면서 그 비중은 점점 하락해 가고 있다.<sup>18)</sup>

한편 <표 4>를 보면 80년-90년대 6대기업집단의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등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6대기업집단의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주식상호보유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6) 이규역(1990)「경제력집중: 기본시각과 정책방향」『한국개발연』제12권 제1호, pp.43-45 정리.

17) 기업집단과 기업계열은 의미가 다르다. 기업계열이란 대기업이 자회사 및 관계회사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이며, 하청회사도 포함된다. 대기업은 모두가 이런 계열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이 서로 수평 결합한 것이 기업집단이다.

18) 일본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의 실태 제7차 조사보고서” 2000년도 자료 참조.

기업집단이 주로 중후장대형 제조업 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시대를 읽지 못한 탓과, 90년대 이후 버블이 붕괴되고 기업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진 탓에 기인한다.

<표 4> 6대기업집단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주식상호보유 비율 추이  
(단위 : %)

| 연도   | 자본금   | 총자산   | 매출액   | 주식상호보유 |
|------|-------|-------|-------|--------|
| 1981 | 14.57 | 15.10 | 15.78 | 25.48  |
| 1987 | 15.19 | 13.28 | 14.68 | 22.65  |
| 1989 | 17.24 | 13.54 | 16.23 | 21.64  |
| 1992 | 15.29 | 12.52 | 13.29 | 22.21  |
| 1996 | 14.09 | 11.43 | 12.54 | 21.37  |
| 1998 | 13.10 | 11.20 | 10.80 | 21.23  |
| 1999 | 13.15 | 11.21 | 10.82 | 20.05  |

자료 : 일본공정거래위원회『企業集團実態(こついで一第6次調査報告書-』(1998.10)및『企業集團実態(こついで一第7次調査報告書-』(2001.5)

한일 양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관계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기업지배의 원천이 계열회사간의 주식소유에 기인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한일 양국의 기업집단은 안정적인 경영 확보를 위해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매수나 합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으며, 안정적 지배력과 기업성장, 그리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저해하고 자본구조를 왜곡하며 자본시장의 감시 규율 기능을 약화시켜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공격을 받는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고도경제성장 기간 동안에 메인뱅크가 타 주주를 대표하여 경영감시에 대한 책임을 수행했기 때문에 대리인비용을 절약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青木(1996)는 이러한 특징을 ‘통합적 모니터링이 메인뱅크에 전속적으로 위임되어져 있다(delegated monitor)’라고까지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기업의 주식상호보유는 본질적으로 ‘오너’(owner) 라는 대주주 경영자가 상호출자를 통해 그룹 내 기업 전체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결국 오너가 직접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비 재벌기업에 비해 오너경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식소유와 의결권

등이 특정 재벌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어 소유주에 의한 기업지배라는 독특한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재벌의 실질적인 경영은 그룹 오너인 총수에게 있으며 재벌 산하 그룹기업의 주식은 오너일족 혹은 그룹의 주식상호보유가 대부분이어서, 적어도 주주에 의한 지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오너경영지배구조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Jensen & Meckling(1976)은 경영자 지분이 증가할수록 대리인비용(agency cost)이 감소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James(1999) 역시 오너는 자신이 창업한 기업을 승계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에 비해 시장원칙에 따른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우석 외(2005)는 2001~2003년까지 539개의 상장기업을 선정, 오너경영기업(444개 기업, 82.4%)과 전문경영기업(95개 기업, 17.7%)간의 기업성과를 비교하여 측정된 결과, 오너경영기업일수록 전문경영기업에 비해 경영효율성이 우월하며 기업성과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4.2 양국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논란과 쟁점

경제력집중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다만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법적 환경 하에서 그 처방과 대응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점령군(GHQ)이 일본의 경제민주화 및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해 재벌을 해체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재벌본사인 지주회사를 해체하여 족벌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개 분산시켰다. 즉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재벌이 군부에 협력하면서 경제력집중을 가져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패전 후 경제력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재벌해체’라고 판단한 것이다.<sup>19)</sup> 재벌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은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이양된 후 일반에게 매각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식을 통한 기업지배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력집중을 포함한 독점금지법 정책은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의 모델이 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66년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면서 강력한 독점규제정책이 대폭 후퇴한 감을 주고 있지만, 이는 독점형성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규제하면서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신축성 있는

19) 이에 따라 1945년 11월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菱), 스미토모(住友), 야스다(安田) 등 4대재벌의 지주회사인 본사의 활동이 정지되었고, 1946년 지주회사를 해산 및 청산하였다.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금지시킨 것은 독점자본에 의한 산업지배의 폐해가 주로 지주회사의 형태를 이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주식소유를 인정하되 경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경영의 효율성과 소유구조의 문제를 관련시켜 타당성을 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라는 막연한 국민적 공감대에 정책목표를 집중시켜 왔다는 지적이 있다.<sup>20)</sup>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WTO체제 출범과 세계경제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접어들면서 1999년 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및 설립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였다. 그러나 주식소유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제한 규정을 두어 세계경제의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한해 대대적으로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시켰다. 이후 2001년 1월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일반회사도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지주회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지주회사의 주식소유에 대한 규제는 남아있어 사실상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중소기업들에게만 지주회사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의 순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을 축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되면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금융지주회사도 일반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및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국내 금융사업이 글로벌경쟁에 노출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2009년 12월부터는 개정금융지주회사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에 대한 인식은 재벌의 형성과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밀착하여 대형화 되었다는 점과, 이후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외형확장에 경영목표를 두면서 재무구조의 악화, 대재벌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혜택, 부채규모의 확대, 재벌의 부동산 취득 및 비생산적 부분에서의 투자활동, 그리고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형 산업부문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국민 대부분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긴장감과 양극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부의 세습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전문성 저하, 중소기업과의 균형적 발전 저해 등등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결국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오늘날 한국 경제발전엔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 전삼현(2004)「지주회사의 주식소유 규제」『규제연구』제13권 제2호, p.24

그러나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 문제 역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본 도요타(TOYOTA)의 경우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물론 상호출자까지 행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초기 모델로 삼았던 일본에서는 출자구조 또는 출자방향에 대해 사전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계나 정치권 그 어느 쪽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기업집단 내의 잉여노력이 있을 때 시장기회에 따라 신속적으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하였던 경제력 집중의 논란과 쟁점은 대기업집단이 계열기업 간 자원을 공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포괄적인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장점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표 5>는 우리나라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의 증감을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면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2004년 대비 증가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자산총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최근 들어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표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 증감 및 변동현황

(단위 : %, 조원)

| 연도     | 2004(51) | 2006(59) | 2008(79) | 2009(48) | 2010(53) | 2011(55) | 2012(63) |
|--------|----------|----------|----------|----------|----------|----------|----------|
| 매출액합계  | 519.9    | 697.0    | 859.7    | 1,009.8  | 1,020.7  | 1,233.8  | 1,461.0  |
| 증감율(%) | -        | 34.06%   | 23.34%   | 17.46%   | 1.08%    | 20.88%   | 18.41%   |
| 자산총액   | 884      | 1,117    | 1,161.5  | 1,310.6  | 1,472.2  | 1,741.9  | 1,977.6  |
| 증감율(%) | -        | 26.36%   | 3.98%    | 12.84%   | 12.33%   | 18.32%   | 13.53%   |
| 당기순이익  | 32.7     | 50.9     | 57.8     | 30.9     | 49.4     | 72.2     | 62.4     |
| 증감율(%) | -        | 56.66%   | 13.56%   | -46.54%  | 59.87%   | 46.15%   | -13.57%  |

주 : 1. ( ) 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

2. 08.4월까지는 자산기준 2조원, 09.4월부터는 5조원 적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보도자료(2012. 4. 13) 재작성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간 경제성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양국의 기업집단 모두 적은 소유권으로 거대한 경제력을 지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재벌이 해체된 후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탄생한 기업집단에서는 특정 대주주가 사라지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집단 내 기업 간에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전문경영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은 오너중심의 경영체제를 이루면서 경영권 유지와 기업확장 수단으로 계열기업 간 상호출자를 확대해 왔지만, 일본이 은행자본의 경영참여를 허용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국의 기업집단은 고도성장기에 한정된 금융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은 메인뱅크를 중심으로 계열이 형성되었고, 한국은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이용하면서 강한 결합관계를 보이는 한편 대부분의 자금을 자기자본이 아닌 은행융자와 외국차관에 의존하면서 소유권의 양보 없이도 기업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양국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합병이 일어나면서 기업집단이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과정을 거쳤고 이로 인해 기업과 은행 간 메인뱅크 관계가 약해지고 주식상호보유비율도 하락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소위 재벌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국민의식과 제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너경영체제 자체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

한편 부(富)의 분산 및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집단과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영자의 상호출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인 소유구조에 있어서는 오너경영이 나온지 전문경영이 나온지 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며 경제력집중 자체가 대기업을 선과 악으로 구분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의 최적 소유지배구조의 형태란 있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한국 전쟁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편승하여 급성장해 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성장한 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이 정책변화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일본이 패전 후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주식의 법인화현상이 실현되는 독특한 일본형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해 나갔듯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역시 궁극적으로는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 특유의 고유형태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강명헌(2000)「기업집단의 비교연구-한국, 일본, 미국」『산업조직연구』제7집 제2호
- 류승민(1992)「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 경영구조와 정책대응」『한국개발연구』제14권 제1호
- 이규익(1990)「경제력집중: 기본시각과 정책방향」『한국개발연구』제12권 제1호
- 전삼현(2004)「지주회사의 주식소유 규제」『규제연구』제13권 제2호
- 정균화(1998)「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재무관리연구』제15권 제2호
- 최우석·이우백(2005)「오너경영과 기업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재무연구』제18권 제1호
- 황인학(2012)「2012년 대기업집단 정책의 쟁점과 과제」『KERI 정책제언』12-04
- 青木昌彦·ヒュー・パトリック編(1996)『日本のメインバンク・システム』東洋經濟新報社
- 広田真一(2005)「メインバンクの役割: 高度成長期-現在まで」財政投資融資ガバナンス研究会
- 池尾和人·廣田真一(1992)『企業の資本構成とメインバンク』堀内·吉野編『現代日本の金融分析』東京大学出版会
- 鈴木 健(2008)『メインバンクと企業集団』みネルウェア書房
- 広田真一(2009)『メインバンクの役割: 高度成長期-現在まで』財政投資融資ガバナンス研究会
- 中谷巖(1984)『企業グループの經濟機能-日本企業の行動原理を探る』季刊現代經濟, No.58, summer.
- 山本達司(2009)「市場の非効率性とTOB戦略-日本における理論とケース」日本管理会計学会誌管理会計学, 第17卷 第2号
- 宮島英昭外(2002)「戦後日本の株式所有構造: 安定株主の形成と解体」財務省財務総合研究所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
- Chang, S. J.(2003),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Restructuring of Chaebols," International Symposium on Business Groups in East Asia, Korea University, pp.39-74
- Fukao, M.(1998), "Japanese Financial Instability and Weaknes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e Role of Markets and Government Symposium, MITI.
- Hukuda Atsuo and Shinichi Hirota(1996), "Main bank Relationships and capital Structure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0(3), pp.250-261
- Hoshi, T., A. Kashyap and D. Scharfstein(1991), "Corporate structure, liquidity, and investment: Evidence from Japanese industrial group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pp.33-60
- James, Harvey(1999), "Owner as manager, extended Horizons and the Family Firm",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Economics of Business, 6
- Jensen, Michael and William Meckling(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 Kang, J.K. and A. Shivdasani(1999), "Alternative mechanism for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An analysis of independent and bank-affiliated firms", Pacific Basin Finance Journal 7, pp.1-22
- Sheard, P. (1994), "Main banks and the fovernance of financial distress", Aoki, M. and H. Patrick, eds., The Japanese Main bank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pp.188-230

---

논문투고일 : 2013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7월 21일

---

〈要旨〉

한일 간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배경과 논쟁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의식, 그리고 대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60여년 앞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던 일본을 되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GHQ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재벌을 해체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기업집단’ 혹은 ‘계열’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명맥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간 재벌의 형성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경제성장에 끼친 영향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나아가 한일 간에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최적의 기업지배구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이 패전 후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주식의 법인화현상이 실현되는 독특한 일본형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해 나갔듯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역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로 정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Background and Debate on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of Big Business Groups in Korea and Japan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big business groups has become an issue in Korea. It results from the difference in views and interpretations from the politicians, the public, and the conglomerates. The difference is due to the sensitive response to the stream of societies without objective facts.

Japan has the history of planning to achieve economic democracy through the process of the GHQ breaking up businesses and dismantling the Zaibatsu Headquarters after the 1945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However, it must be recognized that after its dismantlement, the Zaibatsu Headquarters has ultimately contributed to Japan’s economic growth with changed names such as ‘Japan’s Business Group’ or ‘Keiretsu’.

Therefore, by comparing the business group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research examines what influence the business groups have on the country’s economy in the rapid economic growth period through corporate governance. Furthermore, it tries to identify how the difference of viewpoints between Korea and Japan concerning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ere formed and if optimal corporate governance exists. This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s big business groups must be developed as the Korean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fit for Korea’s situation, as Japan developed a unique Japanese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which made corporate capitalism after the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